

##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① 대한민국 불평등 시작의 원년, 1995년

2016.10.14. | 정승일 새사연 연구이사,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정책연구소 소장 |  
sijeong11@naver.com

1990년대 중후반 이후 근로소득자들의 실질소득 증가가 대부분의 경우 멈추거나 오히려 감소했으며, 유일하게 실질임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가장 월급이 많은 연봉 6천7백만 원 이상의 상위 10% 근로자들뿐이다. 그리고 이들 내에서도 연봉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연봉이 수억이 넘는 최상위 0.1~1%의 임원급 경영자들이다. 이들에게 근로소득 집중이 진행되어 그야말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2016년 3월에 발표된 IMF(국제통화기금)의 <아시아의 불평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3월 16일자 신문기사)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소득 상위 10%가 전체 가계/개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현재 45%이며 이것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즉 한국은 가장 소득이 높은 상위 10%가 평균적인 서민 가정에 비해 4.5배나 많은 소득을 올려 아시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이다. 싱가포르의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이 42%이고 일본 006역시 41%로 우리보다 낮다. 더구나 뉴질랜드(32%)와 호주(31%), 말레이시아(22%)는 한국에 비해 훨씬 평등한 나라들이다.

IMF의 <아시아 불평등 분석>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상대적으로 평등한 나라였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순식간에 불평등한 나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온다. 그 변화의 속도가 아주 급격하다. 1995년만 해도 한국의 소득 상위 10%는 전체 국민소득의 29%를 가져갔다. 그런데 18년 뒤인 2013년에는 그것이 45%로 급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아시아 나라들에서는 그것이 불과 1~2% 늘어났는데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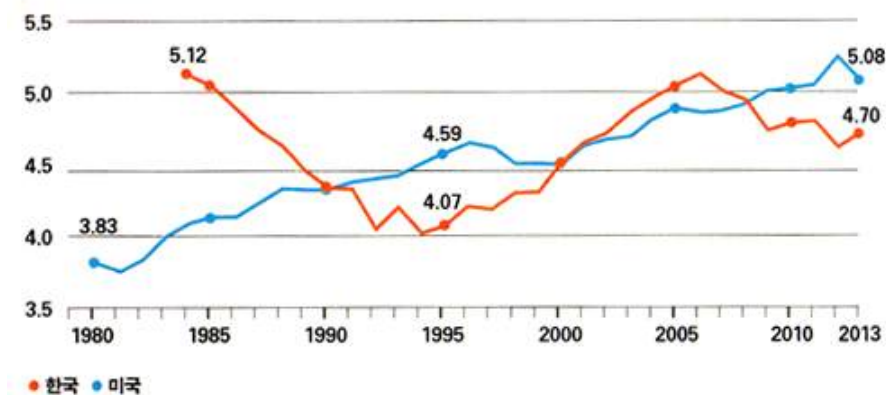
소득 상위 10%에는 연봉 7천만 원 이상의 모든 월급쟁이들도 포함된다. 즉 은행과 증권사, 재벌계 대기업의 과장급 이상 직장인들과 임원들은 모두 소득 상위 10%에 속한다. 또한 여기에는 연봉 1억5천만 원에 재산 20억이 넘는 최상위 1%도 포함된다. 그런데 가장 부유한 이들 중 소득 상위 1%가 전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다. 1995년에만 해도 7%였는데 18년 뒤인 2013년에는 12%로 올라간 것이다. 즉 1995년에는 가장 부유한 1%가 평균 소득의 7배를 벌었는데, 이제는 12배를 벌고 있다. 이 역시 아시아 최고 수치이다.

다만 소득 상위 1%가 가계소득의 14%를 가져가는 싱가포르에 밀려서 2위를 차지했을 뿐이다. 하지만 1995년 이후 상위 1%의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에서만큼은 한국이 아시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 1위이다.

## 소득분배 불평등이 시작된 것은 1995년

우리나라의 경제 불평등은 아시아만이 아니라 세계적 기준으로도 심각하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가장 못 버는 최하위 10%와 가장 잘 버는 최상위 10%의 임금을 비교할 때 한국의 그것은 4.7배(2013년)로 OECD 33개 회원국 중 4번째로 불평등이 심하다. (장하성, <왜 분노해야 하는가>, 62쪽). 게다가, 이 비교 수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임시직 노동자(알바 및 비정규직)와 저임금의 소기업 노동자까지 새로 포함하면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진다. 가장 돈을 못 버는 최하위 10%와 가장 돈을 잘 버는 최상위 10%의 임금 격차가 무려 5.9배에 달하는 것이다. (앞의 책, 63쪽).

그림 1. 한국과 미국의 상용근로자 임금소득 하위 10% 대 상위 10%의 임금비율



자료 : OECD, 재인용 : 장하성, <왜 분노해야 하는가>, 64쪽.

그런데 그림 1은 우리나라에서 소득 불평등이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의 10년 기간 중에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다는 점 또한 명백하게 보여 준다. IMF의 위 <아시아 불평등 분석> 보고서 역시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동아시아의 네 마리 용'과 함께 높은 경제성장과 공정한 분배라는 두 마리 새를 동시에 잡은 드문 나라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1990년대 중반 이전 시기란 바로 대부분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 등 군인 출신 대통령이 집권했던 이른바 개발독재의 시기이다. 그 시기는 야권의 경제학자와 정치인들이 이른바 '중상주의적' 국가 주도, 재벌 주도 경제성장 체제이며 또한 그들이 '비정상적인 시장 경제' 또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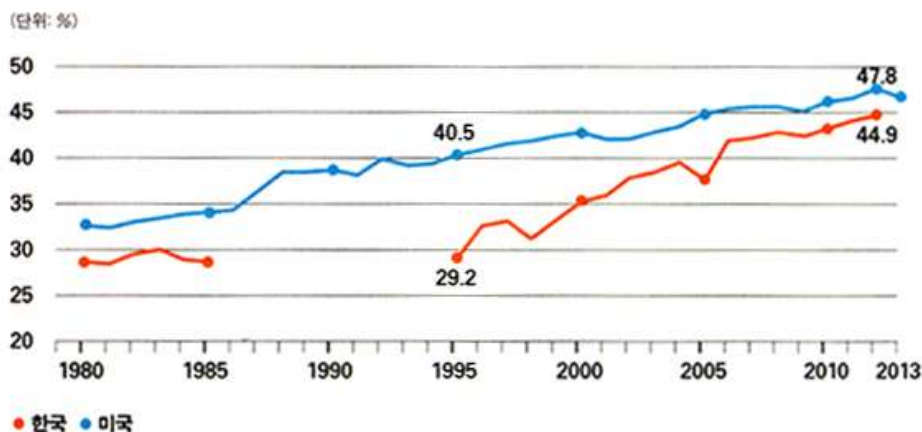
관치경제' 라고 맹렬하게 비난하는 시기이다. 그런데 그렇게 비난하는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장하성 교수의 책에 나오는 통계적 사실 역시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불평등이 완화되었다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그림 1은 빈익빈 부익부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지는 시점은 매우 공교롭게도 1990년대 중반부터이며, 이 기간은 김영삼 문민정부와 김대중 민주정부가 집권한 시기라는 것을 명백한 통계적 사실로서 보여준다.

재산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모두 합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볼 경우에도 불평등은 과거에 비해 심각해졌다. 더구나 종합소득 불평등은 노동소득(근로소득) 불평등보다 그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한데, 주목할 사실은 종합소득의 불평등 역시 1990년대 중반부터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림 2에서 보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상위 10%의 개인 종합소득이 총 소득(개인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30%를 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가장 잘 버는 상위 10% 개인의 종합소득이 개인 평균 종합소득의 3배를 넘지 않았던 것이다. 더구나 그 수치는 1979-1995년의 기간 중에 거의 변동이 없었고 그만큼 종합소득 불평등이 거의 악화되지 않았다. 이 점은 가장 부유한 소득 최상위 1%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최상위 1% 개인의 종합소득은 개인 평균 종합소득의 7.2배(1979년)에서 6.9배(1995년)로 그 기간 중에 오히려 줄었다. 빈부격차가 그 기간 중에 오히려 완화된 것이다.

하지만 1995년부터 대반전이 시작된다. 1995년부터 시작하여 최근인 2013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개인소득의 불평등 즉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이것은 김대중 + 노무현 민주정부 집권기인 1998-2007년의 10년을 포함하며 또한 이명박 + 박근혜 보수정부 집권기인 2008-2013년도 포함한다.

그림 2. 한국과 미국의 개인소득 상위 10%의 소득집중도



자료: The World Top Incomes Database, 재인용 : 장하성, <왜 분노해야 하는가?>, 64쪽.

## 왜 분노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장하성 교수의 책 『왜 분노해야 하는가?』에 나오는 통계적 사실을 가지고 한국경제에서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1995년을 전후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개발독재와 재벌체제의 전성기였던 1970-80년대가 아니라 1995년경이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려면 소득 불평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팩트가 필요하다. 다행히 이런 상세한 사실 발굴(fact finding) 작업을 해 준 연구자가 있다. 김낙년 교수이다. 소득 불평등에 관한 그의 연구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국내외에서 좋은 평을 듣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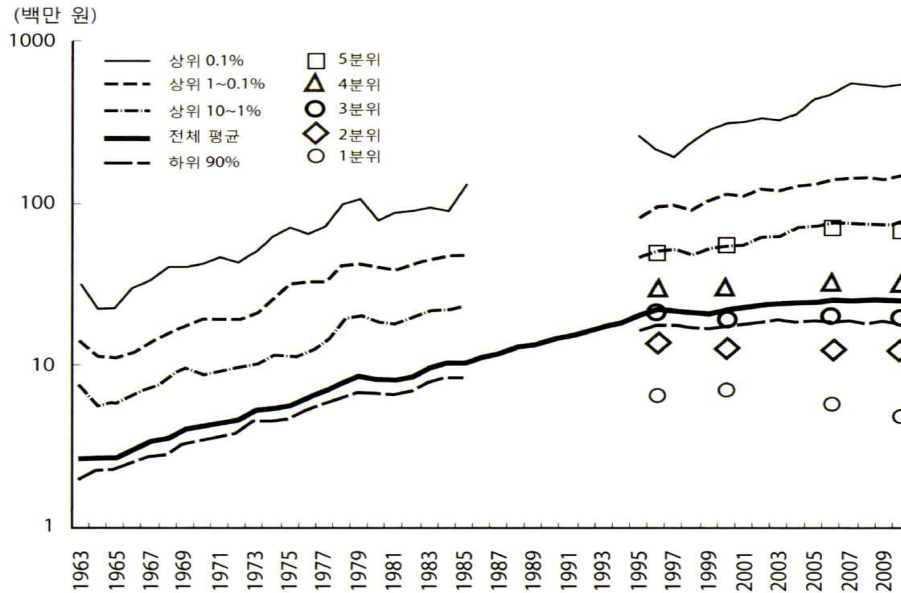
김낙년은 국세청 근로소득세 자료를 이용하여 1963년부터 2010년에 이르는 48년간의 노동소득(임금소득) 불평등에 관하여 연구했다. 그가 제시하는 팩트들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체험한 사실들과 다르지 않다.<sup>1)</sup>

먼저 그는 1960~90년대 초반에 이르는 30여 년간의 개발독재 및 고도성장기에는 임금소득의 불평등이 지금보다 심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다소 기복은 있지만 불평등 수준이 낮게 유지되었다는 명백한 사실을 국세청 통계로서 지적한다. 그가 작성한 그림 1에 나타나듯이, 196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에 이르는 30여년간 모든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계속 상승했다. 월급이 많은 상위 10% 근로자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임금 상승률이 높지 않았으며, 월급이 가장 적은 하위 10%의 근로자들도 월급이 그들만큼 계속 상승했다. 따라서 이 30여년 간의 기간은 ‘동반성장’이 비교적 잘 달성된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김낙년이 인용한 국세청 통계를 보면 199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먼저 1999-2010년의 기간에는 근로소득 즉 월급의 상승률이 그 이전 시기에 비해 현격하게 낮다. 거의 미미한 증가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둘째로, 월급이 많은 상위 근로소득자와 그렇지 못한 하위 근로소득자 간에 월급 인상폭 즉 실질임금 증가율이 큰 격차로 벌어진다. 가장 월급이 적은 1분위 즉 하위 20% 근로자들의 경우 1999~2010년의 11년간 실질임금 상승은커녕 오히려 실질임금이 상당 폭으로 하락했다. 2분위 즉 하위 20~40%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그 11년의 기간 중에 실질임금이 소폭 하락했다. 3분위 즉 40~60%의 근로소득자들 역시 그 기간 중에 실질임금이 미미하지만 줄어들었다. 4분위 즉 그런대로 월급이 꽤 있는 상위 40~20% 사이의 월급쟁이들조차 이 기간 중에 실질임금이 사실상 늘지 않고 정체 상태였다. 유일하게 1999-2010년의 11년간 실질임금이 늘어난 것은 근로소득 5분위 즉 가장 월급이 많은 상위 20% 뿐이었다.

1) 김낙년 (2014), 「한국의 소득분배 : 장기추이와 국제비교」, 이영훈 엮음, 『한국형 시장경제 체제』, 서울대 출판문화원.

그림 3. 소득 그룹별 1인당 근로소득(2000년 불변가격) 추이



자료: 김낙년, 「한국의 소득분배: 장기추이와 국제비교」, 이영훈 역음, 『한국형 시장경제 체제』, 246-293쪽.

이 기간 중에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기에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왜 전체 월급쟁이의 80%에서 실질임금이 줄거나 또는 정체되었을까? 더구나 가장 못 버는 하위직 노동자일수록 더 월급이 줄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여기에는 무슨 신비하고 복잡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직접적인 이유는 자명하다. 이 기간 중에 알바와 비정규직, 사내하청과 외주전환 등으로 과거에 비하여 저임금의 불안정 노동자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1999-2010년의 11년은 바로 김대중-노무현-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집권 기간이었고 그 정부들은 모두 ‘노동시장 유연화’의 이름으로 위 정책을 추진했다. 그리고 전체 근로소득자의 80%가 실질임금이 줄거나 또는 정체된 그 11년 동안 한국경제는 매년 3~5% 성장했고 노동생산성도 그만큼 계속 높아졌다.

### 가장 부유한 1%에 유리한 방향의 경제구조 개혁

가장 월급이 많은 상위 20% 근로소득자들 역시 그 내부를 더 정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들을 더 세분화하여 상위 10~20%와 그리고 상위 1~10%, 0.1~1%, 그리고 0.1% 미만이라는 4개의 그룹으로 세세하게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상위 10~20%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총근로소득의 증가율과 거의 같다. 즉 1999-2010년의 11년간 이들의 실질임금이 늘었으며 미미하게 늘었을 뿐이다. 이들에 비하면 근로소득 상위 1~10%의 실질임금 증가율이 약간 더 높다.

그런데 그 1~10% 내에서도 가장 월급이 많은 최상위 1%,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월급의 0.1%의 실질임금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즉 연봉이 수억이 넘는 최상위 근로소득자 1~0.1%의 임원급 경영자와 CEO들이 가져가는 월급=근로소득은 1997-2010년의 1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이야기이다. 결론적으로, 1998년 이후 그나마 총 근로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속도로 실질임금이 상승하고 있는 근로소득 상위 10% 계층의 내부에서도 최상위 0.1% 근로소득자들에게로의 소득 집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근로소득자들 간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진행된 기간의 대부분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통치 기간이며, 이명박 정부 통치 기간도 일부 포함된다. 이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추진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이어받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장주의적 구조개혁이 그것을 의도했건 안했건 관계없이, 최종적으로는 가장 부유한 최상위 1% 또는 0.1%의 부와 소득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한 증거로서 보여준다.

그렇다면 월급이 가장 많은 상위 10%의 근로소득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근로소득세 자료를 인용한 윤호중 의원실 보도자료(2015년 9월 9일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상위 10%의 근로소득자란 연봉 6천7백만 원 이상인 봉급쟁이들인데 이들의 숫자는 169만2022명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회사와 삼성과 현대차, 롯데 등 재벌계 대기업, 그리고 한전과 공사 등의 공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과 현장 노동자, 그리고 임원급 경영자들이다.

표 1. 2014년 연 근로소득 분포

	인원수 (명)	분위 소득 구간	분위 소득 합계 (백만원)	비중 (%)	1인당 평균소득 (천원)
1분위	1,564,932	0~400만원	2,905,610	0.57%	1,857
2분위	1,580,136	400~950만원	10,642,892	2.07%	6,735
3분위	1,707,164	950~1,400만원	20,254,436	3.94%	11,864
4분위	1,604,034	1,400~1,800만원	25,690,498	5.00%	16,016
5분위	1,661,864	1,800~2,300만원	33,979,091	6.62%	20,446
6분위	1,559,937	2,300~2,900만원	40,342,026	7.86%	25,861
7분위	1,614,097	2,900~3,700만원	53,018,120	10.32%	32,847
8분위	1,638,473	3,700~4,850만원	69,447,436	13.52%	42,385
9분위	1,630,796	4,850~6,700만원	92,748,715	18.06%	56,873
<b>10분위(상위 10%)</b>	<b>1,626,214</b>	<b>6,700만원 이상</b>	<b>164,518,758</b>	<b>32.04%</b>	<b>101,167</b>
상위 10-5%	860,054	6,700~8,500만원	63,392,486	12.34%	73,708
상위 5-1%	653,138	8,500~1억3,500만원	66,123,408	12.88%	101,240
<b>상위 1%</b>	<b>178,830</b>	<b>1억3500만원 이상</b>	<b>39,379,157</b>	<b>7.67%</b>	<b>220,204</b>
상위 1-0.5%	91,228	1억3,500~1억7천만원	13,106,079	2.55%	143,663
상위 0.5-0.1%	71,612	1억7천~3억5천만원	15,678,730	3.05%	218,940
<b>상위 0.1%</b>	<b>15,990</b>	<b>3억5천만원 이상</b>	<b>10,594,349</b>	<b>2.06%</b>	<b>662,561</b>
상위 0.1-0.05%	8,418	3억5천만원~4억9천만원	3,388,545	0.66%	402,536
상위 0.05-0.01%	7,572	4억9천만 원 이상	7,205,804	1.40%	951,638
<b>상위 0.01%</b>	<b>1,868</b>	<b>10억원 이상</b>	<b>3,505,069</b>	<b>0.68%</b>	<b>1,876,375</b>
합계	16,187,647		513,547,581	100.00%	

자료 : 윤호중 의원실 보도자료, 2015년 9월 9일.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작년 [2015년] 149억5400만원의 보수를 받아 ‘2015년 최고경영자(CEO) 연봉 왕’에 올랐다. 권 부회장이 이끄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은 작년 사상 최대 실적(영업이익 12조7900억원)을 냈다. 권 부회장은 보수가 1년 만에 60% 가까이 늘어나, 국내 재계 오너들을 제치고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다. 권 부회장의 보수는 삼성전자 직원 평균 연봉(1억100만원)의 148배에 달한다”. (2016년 3월 31일자 조선일보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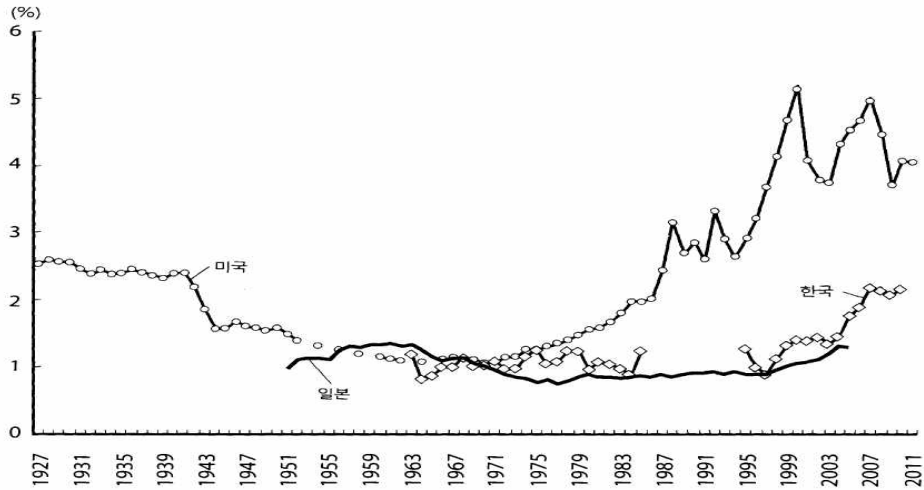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은 은행장 연봉이 5억원이 안되면서 행원 평균 연봉과의 격차가 가장 적다. 국민은행은 윤종규 행장과 이홍 부행장에게 총 6억4700만원을 지급했다. 기업은행은 권선주 행장과 박춘홍 전무에게 총 6억5500만원을 지급했다. 윤 행장은 KB금융지주로부터 연봉을 받기 때문에 지난해 총 연봉이 5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반면 권 행장은 2014년 3억62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지난해 기본급이 올랐지만 연봉이 4억원을 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권 행장이 4억원을 받았다면 권 행장은 행원 평균 연봉의 5.8배에 불과한 연봉을 받는 셈이다. 행원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씨티은행은 은행장의 연봉이 5억4100만원으로 행원 평균 연봉 9100만원의 6배도 안된다. (2016년 4월 11일자 매일경제신문 기사).

또한 최상위 1%의 근로소득자란 연봉 1억3천5백만 원 이상을 버는 봉급생활자들이며 이들의 숫자는 17만8830명인데, 이들의 평균 연봉은 2억2천20만원이다. 여기에는 대기업 이사가 포함된다. 그리고 이들 1% 중에서도 1/10인 0.1%의 근로소득자란 최소한 연봉 3억5천만 원 이상을 버는 1만5,990명의 근로소득자를 말하며, 이들의 평균 연봉은 6억6,256만원이다. 여기에는 시중은행의 은행장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들 0.1% 중에서도 1/10인 0.01%의 근로소득자란 1년에 최소한 10억 이상의 연봉을 벌여가는 근로소득자들인데, 이들의 숫자는 1,868명이다. 이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에서 수출대기업에 근무하는 회장과 부회장, 사장과 부사장, 전무, 상무 등 임원급 인사들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다수의 근로소득자들에서 실질임금이 하락하거나 또는 정체인 상태에서, 유일하게 실질임금이 상승한 것은 상위 10%의 근로소득자들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연봉이 높은 상위 1%와 최상위 0.1%에서 연봉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더구나 대기업과 은행 등의 임원급에 해당하는 최상위 0.1%의 근로소득자들의 연봉 증가율이 그들보다 덜 버는 0.1~1%의 그것보다 확연하게 높다. 다시 말해서, 1995년 이후, 특히 1998년 이후 가장 월급이 많이 증가한 것은 가장 월급 등 근로소득이 높은 최상위 0.1%이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1990년대 중후반 이후 근로소득자들의 실질소득 증가가 대부분의 경우 멈추거나 오히려 감소했으며, 유일하게 실질임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가장 월급이 많은 연봉 6천7백만 원 이상의 상위 10% 근로자들뿐이다. 그리고 이들 내에서도 연봉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연봉이 수억이 넘는 최상위 0.1~1%의 임원급 경영자들이다. 이들에게 근로소득 집중이 진행되어 그야말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림 3. 상위 0.1% 근로소득자로의 소득집중 - 한국, 일본, 미국



자료 : 김낙년(2014), 273쪽.

## 천조국의 불평등 따라하기

한국의 근로소득 불평등은 미국의 근로소득 불평등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위의 그림 3에 나타나듯이, 1960년대까지만 해도 대기업 CEO 등 임원급 경영자들에 해당하는 최상위 0.1% 근로소득자들의 연봉은 평균적인 근로자 연봉의 10배 정도였고 이러한 격차는 미국과 일본, 한국의 세 나라 모두 비슷했다 (김낙년, 273쪽). 그런데 미국에서 먼저 변화가 시작된다. 그 격차는 1970년대부터 벌어지다가 1980년 말과 1990년대 말에 급격히 벌어져, 2000년대에는 그것이 40배로 증가했다. 최상위 0.1%와 평균 노동자의 연봉 격차가 10배에서 40배로 400% 증가한 것이며 그만큼 빈부격차가 증가하였다.

미국에서의 변화는 상위 0.1% 중에서도 연봉이 가장 높은 100대 기업 CEO들, 즉 최상위 0.0001%의 연봉을 보면 더욱 실감나게 알 수 있다. 미국 100대 기업 CEO들의 연봉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1백만 달러에 못 미쳤지만 2000년대에는 4천만 달러로 증가했다. 30년 동안 4000%가 폭증한 것이다. 그런데 그 30년 동안 미국 근로소득자들의 평균 연봉은 3~4만 달러(1999년 불변가격)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었다. 달리 말해서, 19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의 100대 대기업 CEO들의 연봉은 평균적인 종업원 연봉의 50배였는데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 1천배에 달한다. 미국에서 이렇듯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진 원인은 레이건-부시-클린턴 정부가 추진한 금융탈규제(financial deregulation)와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s capitalism)의 전면화, 그리고 그 일환으로 도입된 상장 대기업 임원들에게 고액의 스톡옵션 및 고액의 단기수익 연동 성과급 지급이었다.



일본의 경우 그 30년 동안 최상위 0.1%와 평균적인 근로소득자간의 연봉 격차가 10배에서 13배로, 30% 증가하는데 그쳤다. 즉 일본 대기업 CEO 등 경영자들의 보수는 미국에서처럼 급격히 늘어나지 않았으며 CEO 연봉과 종업원 연봉간의 격차도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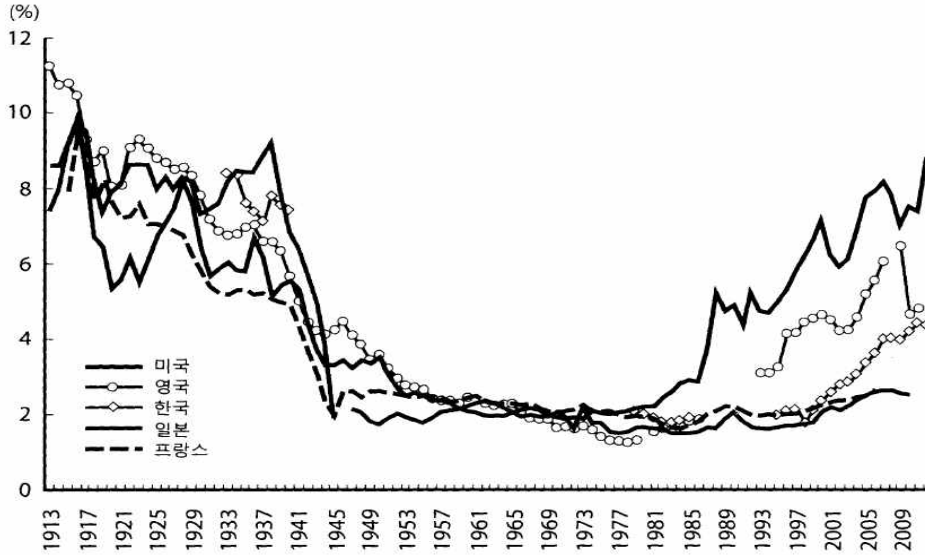
한국의 경우, 그림 3이 보여주듯이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에 이르는 고도성장기에는 미국보다 일본 자본주의 유형에 가까웠다. 그런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미국식 시장개혁이 진행되면서 급격히 소득분배의 불평등 패턴 역시 미국과 비슷한 쪽으로 변화한다. 즉 최상위 0.1%와 평균적인 노동자간의 연봉격차가 10배에서 20배로 200% 증가했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봉이 높은 근로소득 최상위 0.1~1%의 연봉이 급증한 것은 기업지배구조와 금융시장, 그리고 노동시장의 구조와 제도를 미국식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기업지배구조에서 펀드와 개미 등 소액주주 투자자들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강화되었으며 또한 기업의 외부자금 조달에서 은행대출보다 회사채, CD 등 유가증권 시장의 역할이 극적으로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종래에 비해 주주가치(shareholder values) 즉 자본시장이 평가하는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행태와 사업구조, 재무구조, 사업구조가 새로 구축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장사 주식을 대거 매입함에 따라 더욱 강해졌다. 주주중시경영(주주가치 경영)은 일반 대기업과 재벌계 대기업들에서 CEO 및 임원들에게 미국처럼 스톡옵션이 부여되고, 연공제 월급이 아니라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기업 구조조정 시장에서 론스타와 보고펀드 같은 사모펀드(PEF)가 새로 출현하여 '기업가치(주주가치) 제고'를 지상 목표로 하는 구조조정에 나선 것도 회사 경영진과 일반 종업원 사이의 연봉 격차를 크게 만들었다.

## 불평등 심화와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주의

그런데 연봉격차, 즉 근로소득 격차만 심해진 게 아니다. 재산소득 등 비근로소득을 포함하는 종합소득의 격차 역시 극심해지고 있다. 193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과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가장 부유한 최상위 0.1%로의 개인소득 집중도는 1930년대까지만 해도 6~9%에 육박했다. 즉 전인구의 0.1%인 최고 부유층의 종합소득이 국민 평균소득(비근로소득 포함)보다 60~90배 많은 소득을 벌었다. (그림 4 참조). 하지만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 격차는 크게 줄어들었고 더구나 선진국들에서 복지국가가 등장한 1950-70년대에는 대체로 2%대로 떨어진 채 안정되었다. 즉 0.1% 최상위 부유층의 개인소득(종합소득)이 국민평균 소득의 20배로 떨어졌다. 부자와 평민간의 소득격차가 과거의 1/4~1/5로 크게 줄어든 것이다.

그림 4. 상위 0.1% 소득집중도의 변천



자료 : 김낙년(2014), 272쪽.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에서 지적되듯이, 이러한 소득격차 축소 즉 불평등 축소는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1930년대 대공황과 함께 시작된 복지국가와 부자 및 대기업 증세, 그리고 노동권 및 노동조합권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민주주의에 의해 정치적으로 강요된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에서 레이건 대통령과 대처 수상이 집권하여 이른바 신자유주의 또는 신보수주의가 지배하는 1980년대부터 미국과 영국을 필두로 다시 1930년대 이전의 소득격차로 회귀하는 정치경제적 움직임이 강력하게 작동한다. 부자감세와 대기업감세, 복지축소와 노동권 약화가 진행되고, 그 결과 2000년대가 되면 미국과 영국에서 부자와 평민간의 소득격차는 1920년대 이전의 수준으로 회귀한다. 1백 년 전인 1916년경처럼, 최상위 0.1%의 부유층이 평민들의 60~90배를 더 버는 시대가 다시 열렸으니, 부자들의 낙원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미국 및 영국과 달리 자유시장 자본주의로의 회귀가 더디게 진행된 일본과 프랑스에서는 1990년대 이후에도 과거에 비해 소득격차가 30~40% 가량 더 벌어지는 것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가장 부유한 0.1% 부유층으로의 소득집중은 1990년대 중반까지 일본-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만큼 지금보다 평등했다. 그런데 그림 4가 보여주듯이, 1997년을 기점으로 0.1% 부유층으로의 소득집중이 유별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부익부 빈익빈의 메커니즘이 본격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

## 2016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6년 10월 14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고용,노동	1/7	노동개혁, 노동자는 없고 기업만 있다	송민정
고용,노동	1/12	노동시장, 유연화보다 소비확대가 우선이다	새사연 노동연구팀
주거	1/15	2016 부동산 시장은 '위험한 균형' 유지할 것	권순형
정치	1/18	야당은 왜 존재하는가?	손우정
농업	1/25	농업의 지속가능성, '쌀' 과 '소득' 에 있다	장경호
주거	1/29	2016년에 대한 기대, 사회주택 활성화의 원년	강세진
복지	2/1	갈등의 복지, 불평등에 '응답하라'	최정은
고용,노동	2/5	지표와 정책으로 본 청년 고용의 현황과 과제	송민정
미디어	2/12	'사이비' 로 불리는 인터넷 매체, 본질은 '여론 통제' 다	김시연
잇:북	2/18	2016 전망보고서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거	2/25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역할	강세진
복지	3/14	1인 가구, '전 연령' 의 문제다	최정은
주거	3/18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① : 서울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들여다보기	황서연, 진남영
주거	4/4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② : 영미권 임차인관리협동조합 염탐하기	황서연, 진남영
사회적 경제	4/11	민주주의의 풀뿌리, 마을공론의 형성 과정	강세진
주거	4/15	개발이익 확대로는 청년임대주택은 공급 '불가능'	권순형
청년	4/18	청년은 청춘(靑春)이어야 한다	송민정
주거	4/22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③ :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 많이 공급되려면?	황서연, 진남영
경제	4/29	한국경제 : 1%를 위한 자본주의	정승일
청년	5/2	소득과 지출로 본 청년의 현재와 미래	최정은
청년	5/19	시골청년 상경분투기	강세진
노동	6/14	여성 임금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미달 및 수혜 현황	송민정
청년	6/20	노동시장 밖의 청년들	새사연 노동연구팀
사회	7/4	가계경제, 2009년 경제위기와 닮았다	최정은
청년	7/22	나는 생활하는가, 생존하는가?	새사연 노동연구팀
청년	8/16	휴가분한 후퇴, 반쪽짜리 지방생활	송민정
주거	8/23	영국 임차인관리조직의 혁신사례 : 런던 브라우닝 EMA(Estate Management Association)	황서연
사회	8/29	비영리단체의 정의 (Defining NPIs)	강세진
복지	9/5	줘어짜는 재정, 개인 부담 늘고 복지 후퇴	최정은
경제	9/12	가계부채, 현재 부실화 막을 방안 세 가지	송종운
경제	9/19	[한국 경제동향①] 장기불황, 양극화, 낙수효과 소멸	김선태
경제	10/14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① 대한민국 불평등 시작의 원년, 1995년	정승일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